

고성신문 선정, 2011년 고성지역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1년 신묘년이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한 해 고성지역에서는 고성군을 주요 발행권역으로 하는 최초의 지역신문인 '강원고성신문'이 창간된 것을 비롯해 국회 의정연수원 도원리 건립 확정,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및 청간 해변 개방 합의, 군청 공무원 숙소거주 논란 등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 또 속초지역에서 촉발된 시·군 통합 문제와 현내면 정치망 어구 건조장 사업 부지 선정 난항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게 됐다. 지난 한 해 고성지역에서 일어난 10대 뉴스를 정리해봤다.

국회 의정연수원 토성면 도원리 일대 건립 확정

2008년 4월 확정됐다가 보류됐던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이 지난해 9월 20일 다시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토성면 도원리 일대 38만㎡에 의정연수원을 건립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권오을 국회의사무총장은 12월 7일 고성군을 방문해 조만간 연수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 청간 해변 개방 합의

고성군의 오랜 숙원인 대대리 포사격 훈련장 이전 문제와 청간 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해결됐다.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문제는 지난해 11월 29일, 청간 해변 경계용 철책 철거 문제는 12월 3일 군청에서 열린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됐다.



속초서 시·군통합 추진 ... 반대추진위 활동 돌입

속초지역 사회단체들이 속초-고성-양양-인제 4개 시·군 통합 건의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해 11월 30일 고성지역 사회단체들이 '시군 통합 반대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반대추진위는 5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앞으로 서명운동과 전단지 배포, 플래카드 게첨 등의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인구 3만명 무너져 ... 군청 공무원 숙소거주 논란

2010년말까지 인구 3만명선을 유지하던 고성군이 지난해 3만명선이 붕괴됐다. 고성군에 따르면 2010년 12월 31일 현재 고성군의 인구는 3만615명이었으나, 2011년 2월 28일 현재 2만9천924명으로 691명이나 줄었다.

이런 가운데 군청 공무원의 30% 이상이 속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으며, 군의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기도 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2010년 9월 조사 결과 공무원 8명이 주소를 속초에 두고 있으며, 141명은 속초에서 거주하면서 주소만 고성군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거주는 속초에서 하면서 주소만 고성군에 둔 경우는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주민들은 이들이 고성지역 상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군수 후보 후원회 기부금액 초과 기부 '유죄'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알프스스키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황종국 당시 군수 후보에게 후원회 기부금액을 초과 기부하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김병태 부회장에게 지난 3월 22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김씨와 사전에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씨와 이모씨 등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부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김병태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 추진의 원활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황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타인 명의로 분산 후원할 것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서로 공모 내지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러시아 냉동명태 직거래 실패 ... 냉동창고는 착공

고성군이 러시아 직수입 명태를 활용해 명태가공 산업을 육성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직거래가 중단되고 국내에서 명태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지난해 10월 5일 국비 38억원, 지방비 27억원 등 총 65억원을 들여 3,315톤의 저장능력을 갖춘 냉동·냉장보관창고 건립 기공식을 가져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다.



송강리 저수지 댐높이기 공사 진통 속 착공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거진읍 농업용저수지 댐 높이기 사업이 송강리 주민들의 수몰위험 우려로 인한 집단 반발 속에서 착공됐다.

송강리 주민들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탄원서를 접수하기도 했으나, 농어촌공사의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현내면 정치망 어구 건조장 사업 난항 계속

고성군이 현내면 화곡리에 현내면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화곡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9일 건조장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고성군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수원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화곡리 주민들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 쌍끌이어선 기승 ... 지역 어민 피해 심각

중국 쌍끌이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 재개로 오징어 어획고가 크게 줄자 고성을 비롯한 동해안 어업인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특별영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어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 쌍끌이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으로 인해 오징어 어획량 감소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협을 통해 강원도에 특별영여자금 21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특별영여자금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 최초의 지역신문, 강원고성신문 창간

고성지역 유일의 지역신문인 '강원고성신문'이 지난해 1월 31일 창간호를 발행했다. '행복한 고성 만들기 · 행정과 주민의 가교 ·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라는 창간 이념으로 창간한 강원고성신문은 이번호까지 총 44호의 신문을 발행하면서, 고성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왔다.

매주 월요일 발행대 우편으로 화~수요일 독자들을 찾아가는 고성신문은 고성 주민들과 출향인들에게 정치·사회·경제·문화·오피니언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식들을 전하며,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